
도봉구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마련



제 출 문

도봉구청 귀중

본 보고서를 「도봉구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이사장

목 차

01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수행체계	8
02		1인가구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9
제 1 절		중앙정부 1인가구 정책 동향	11
제 2 절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동향	26
제 3 절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사례 분석	48
03		도봉구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분석	63
제 1 절		도봉구 인구 및 사회복지 현황	65
제 2 절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동향	81
제 3 절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직 및 사업 현황	100
04		도봉구 1인가구 실태조사	125
제 1 절		조사 개요	127
제 2 절		조사 결과	131
제 3 절		소결	261

05		도봉구 1인가구 질적 연구	273
제 1 절		도봉구 1인가구 당사자 FGI	275
제 2 절		도봉구 1인가구 현장 전문가 FGD	285
제 3 절		소결 : 결과 통합 분석	291
06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마련	297
제 1 절		연구결과 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299
제 2 절		도봉구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 제시	307
제 3 절		도봉구 1인가구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검토	309
제 4 절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및 핵심 과제	315

참고문헌

부록

01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수행체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7.2%였으나,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의 3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가족 단위였던 기존의 가구 구조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져 향후 1인가구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 삶의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표 1-1] 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구분	(단위 : 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19,111,030 (100.0)	19,367,696 (100.0)	19,673,875 (100.0)	19,979,188 (100.0)	20,343,188 (100.0)	20,926,710 (100.0)	21,448,463 (100.0)
1인가구	5,203,440 (27.2)	5,397,615 (27.9)	5,618,677 (28.6)	5,848,594 (29.3)	6,147,516 (30.2)	6,643,354 (31.7)	7,165,788 (33.4)
2인가구	4,993,818 (26.1)	5,067,166 (26.2)	5,260,332 (26.7)	5,445,691 (27.3)	5,663,330 (27.8)	5,864,525 (28.0)	6,076,549 (28.3)
3인가구	4,100,979 (21.5)	4,151,701 (21.4)	4,178,641 (21.2)	4,203,792 (21.0)	4,217,736 (20.7)	4,200,629 (20.1)	4,169,956 (19.4)
4인가구	3,588,931 (18.8)	3,551,410 (18.3)	3,473,897 (17.7)	3,396,320 (17.0)	3,300,114 (16.2)	3,271,315 (15.6)	3,154,286 (14.7)
5인가구	940,413 (4.9)	924,373 (4.8)	886,479 (4.5)	849,167 (4.3)	801,048 (3.9)	761,417 (3.6)	715,982 (3.3)
6인가구	217,474 (1.1)	211,475 (1.1)	197,517 (1.0)	182,886 (0.9)	166,866 (0.8)	147,172 (0.7)	132,665 (0.6)
7인가구 이상	65,975 (0.3)	63,956 (0.3)	58,332 (0.3)	52,738 (0.3)	46,578 (0.2)	38,298 (0.2)	33,237 (0.2)

*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대상으로 집계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로 1인가구 맞춤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독사 예방과 사회서비스 제도 보완을 시행할 예정임.

-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여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3년에는 1인가구 ‘3불(不) 해소’ 정책에 따라 불편 해결을 위한 돌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불안해소를 위한 안전 강화, 불만 완화를 위한 고립 극복 및 정책참여 지원 확대를 계획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서울 1인가구 포털, 서울시 1인가구 담당관, 서울시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연령별로 다른 1인가구의 정책욕구를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 단위의 1인가구 정책 역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도봉구의 1인가구는 2021년 인구총조사 기준 서울시에서 중구, 종로구에 이어 3번째로 1인가구의 수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도봉구 1인가구의 수는 2019년 45,013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였던 것에 비해, 2023년 4월에는 1인가구의 수가 50,254가구로 증가하고 전체 가구의 36.4%를 차지함에 따라 1인가구의 수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2] 도봉구 세대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전체	세대별					세대당 인구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5인세대 이상	
2019년	138,508(100.0)	45,013(32.5)	33,537(24.2)	28,509(20.6)	23,975(17.3)	7,474(5.4)	2.41
2020년	139,114(100.0)	47,242(34.0)	35,051(25.2)	27,896(20.1)	22,344(16.1)	6,581(4.7)	2.34
2021년	138,656(100.0)	48,682(35.1)	35,854(25.9)	27,255(19.7)	20,851(15.0)	6,014(4.3)	2.29
2022년	138,356(100.0)	49,922(36.1)	36,182(26.2)	26,914(19.5)	19,708(14.2)	5,630(4.1)	2.25
2023년 4월	138,314(100.0)	50,354(36.4)	36,286(26.2)	26,759(19.3)	19,417(14.0)	5,498(4.0)	2.24

주) 2019년~2022년은 12월 말 기준, 2023년은 4월 말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세대원수별 세대수, 도봉구 인구 및 세대현황

- 이와 같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봉구는 지난 2021년 서울시 구 단위 중 거의 최초로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1인가구 온라인정책공론장을 개최하는 등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였음. 또한 2023년 1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고, 4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한편,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에 따라 1인가구 형성 원인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은 비혼, 만혼과 같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1인가구에 속하게 되지만 중장년은 이혼, 기러기 가족처럼 가족 해체로 인해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노년은 사별 등 가족 구성원의 탈락을 원인으로 하고 있음. 즉, 청년은 취업이나 학업과 같은 자발적 이유인 경우가 많으나, 중장년과 노년은 비자발적 이유가 높게 나타났음(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실제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자립(33.4%)이 가장 높으며 건강관리(22.1%), 주거안정(21.6%)순으로 나타났음. 여성 1인가구는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에 대한 수요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41.0%는 경제·자립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는 생활안전, 노년 1인가구는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를 확인해볼 수 있음.
- 중장년 인구가 많은 도봉구의 인구특성에 따라 도봉구의 1인가구 역시 40~64세의 중장년이 42.5%로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31.6%, 20~39세 청년층이 25.6%로 나타났음(2021년). 생애주기 및 동별 1인 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노년 1인가구는 도봉 1·2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도봉구 도봉1동은 2022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도 노년층 1인가구 밀집지역 22개동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음. 또한 중장년 1인가구는 방학1·2동과 쌍문1·2동, 청년층의 경우 창 1·2·5동과 쌍문3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별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연령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주거유형별로 상이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의 실태와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이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1인가구 정책의 환경변화 및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수요 확대 및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도봉구 1인가구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따라서 도봉구의 차별

화된 1인가구 정책의 수립과 1인가구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중장기 계획의 기초 아래 도봉구의 지역적 특색과 1인가구 실태를 반영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정책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향후 1인가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업의 목적

- 첫째, 도봉구 1인가구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인가구의 특색, 현황 등을 분석하고 도봉구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1인가구 지원의 정책적, 재정적 준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둘째, 1인가구 당사자 및 취약계층 1인가구, 지역 내 민관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여 1인가구 복지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우수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로 도봉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도봉구 행정구역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2023년), 계획년도(2024~2028년, 5개년)
- 내용적 범위
 - 도봉구 1인가구 현황
 -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 1인가구 당사자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
 - 1인가구 지원정책 발굴 및 방향 제시

4. 기대효과

- 1인가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정책, 사례, 통계자료 분석 등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1인가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1인가구의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정확한 현황 진단이 가능하며, 정책 수립을 위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음.
- 1인가구 당사자, 공무원,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점에서 1인가구의 욕구와 정책 제안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제 2 절 연구수행체계

단계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진	전문가자문위원	가족정책과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향성 관련 의견 수렴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방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자문위원 구성 논의 - 연구수행 방향 논의 - 구청 통계자료 취합 및 제공 - 도봉구 1인가구 정책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상위계획·관련정책 분석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 도봉구 1인가구 현황 및 정책 분석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분석 - 설문지초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검토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 시행 및 분석 • 1인가구 당사자 FGI 시행 • 공무원 및 전문가 FGD 시행 (개별심층면접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전문 조사 기관 연계) - FGI, FGD 시행 및 분석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 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협조 - 공문 작성 - FGI, FGD 참여자 논의 - 1인가구 욕구·실태조사 결과 검토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정책 방향성 제시 • 영역별 1인가구 지원 정책 제안 •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종합,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안) 수립 - 지역의 특성과 1인가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안) 제시 - 전문가 자문과 보고회 등을 통해 수정후 최종계획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에 대해 자문 - 핵심과제 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실무 지원 - 정책담당부서와 협의 - 계획(안) 및 정책(안)에 대한 내부검토시행
▽				
도봉구 1인가구 정책 마련				

02



1인가구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제 1 절 중앙정부 1인가구 정책 동향

제 2 절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동향

제 3 절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사례 분석

제 2 장 1인가구 정책동향 및 사례 연구

제 1 절 중앙정부 1인가구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1인가구 관련 계획

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래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아 국정비전 및 운영원칙, 목표를 결정하였음.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의 4대 기본 부문과 미래, 지방시대에 대한 총 6개 부문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국민께 드리는 약속(23개) 및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음.
- 6대 국정목표 중 국정목표3은 사회 부문에 대한 목표로서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문화강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음.
- 1인가구와 관련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3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44, 국정과제48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정과제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는 다양한 공급주체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함. 1인 가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추진함.
 - 국정과제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은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교정시설, 외국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사회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에서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을 언급하고 있음.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원칙 : 국익, 실용, 공정, 상식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정치·행정)

-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

-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⑧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

-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⑪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쟁기겠습니다.
- 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미래)

- ⑭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 ⑯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⑱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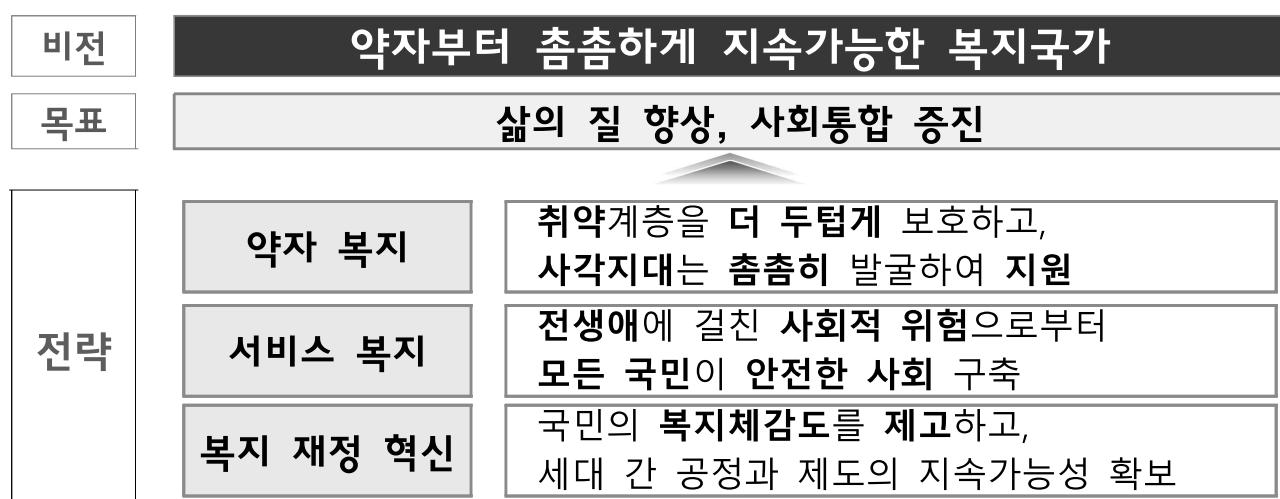
- ㉑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㉒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㉓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림 2-1]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및 목표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나.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 정부는 2023년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함.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사회의 다양한 격차 완화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 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3개 전략(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결정하였음.
- ‘약자 복지’ 추진을 위해 은둔·고립, 가족돌봄 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마련, 사회복지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취약국민의 핵심 생활비 부담 완화 및 긴급지원 내실화 등을 실시함.
- ‘서비스 복지’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건강·돌봄·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 등을 실시함.
- ‘복지 재정 혁신’ 추진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실시함.
- 복지국가 전략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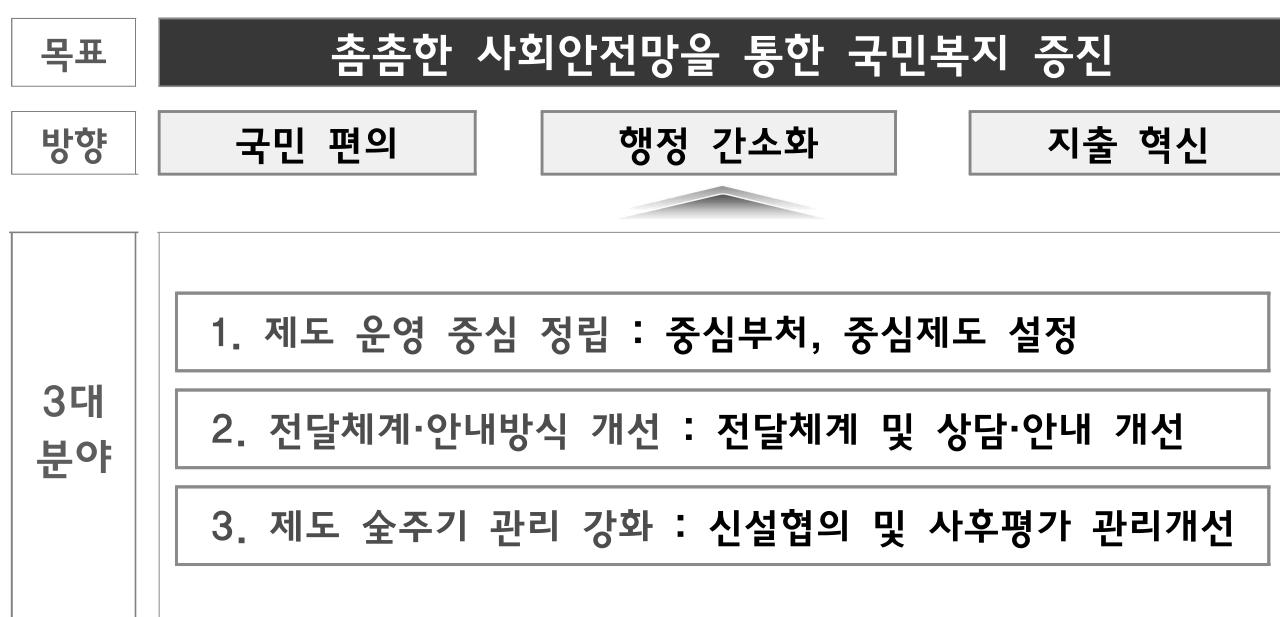
[그림 2-2]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5.31.).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 복지국가 전략 추진 핵심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꼽을 수 있음.

1)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 국민 입장에서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관리 및 내실화를 추진함. 국민 편의, 행정 간소화, 지출 혁신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3대 분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
- ‘제도 운영 중심 정립’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핵심 사업부처를 정립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함.
- ‘전달체계·안내방식 개선’을 위해 유사 전달체계 연계 운영 및 공동이용 운영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담·안내 등의 기관 연계 운영 강화 및 AI 기반 24시간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안내방식을 개선함.
- ‘제도 전(全)주기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및 DB 구축 등 미협의 사업 파악 및 이행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 근거기반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환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그림 2-3]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추진 방향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5.31.).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2)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전망되며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투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히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복지 의제로 선정함.
- 이에 따라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을 고도화 추진 방향으로 정하였고, 이와 함께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초등돌봄 고도화, 미래세대 마음돌봄 고도화의 3개 분야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음.
- ‘국민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살펴보면, 이용대상별로 돌봄서비스를 확충·강화하여 앞서 확인한 고도화 방향에 따라 우선 추진하고자 함. 특히,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등 새로운 사각지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필요 중장년에게는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돌봄서비스 이용을 보장함.
- ‘초등돌봄 고도화’를 살펴보면,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함.
- ‘미래세대 마음돌봄 고도화’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등 미래세대의 마음돌봄 서비스의 지원체계 보완 등을 추진함.

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 2023년에는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소멸·사회갈등 등 공동위기 타개를 위한 연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 증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의 3대 사회상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9개 주요 과제와 2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1인가구 정책은 핵심목표1(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와 관련이 있음. 해당 과제에서는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사회관계망 형성 및 돌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구분	프로그램			
공통	돌봄 병원동행, 긴급돌봄 지원	상담 당사자 및 원 가족 상담 지원	관계 고독, 고립 등 방지 사회관계망 형성	교육 일상생활, 자기개발, 관계개선 프로그램
■ 청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진입 예정자 독립생활 준비교육(정서·경제·생활유지 등) · 청년 1인가구 주도의 사회관계망 플랫폼 활성화 			
■ 중장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등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준비 교육(심리상담, 재산상담, 인생 되돌아보기 등) ·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고령자 상호간 돌봄 자원봉사 사업 			

[그림 2-4]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 ‘청년 취·창업 지원’에서는 구직단념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제시하였고, 취업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제시하였음.
 -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자산형성을 지원함.
- 핵심목표2(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의 세부 정책과제에서는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약자를 지원하고자 함.
-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강화, 고독사 및 취약청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및 돌봄·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함. 또한 사회위기 대응 범부처 TF 운영을 통해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함.
 - ‘사회관계망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는 지역사회 및 단체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함.



[그림 2-5] 2023년 사회정책 비전과 목표

자료 :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023.8.7. 검색)

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및 2023년도 시행계획

-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 구현 및 이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 위기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특히, 2018년 7월 개정 후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2018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1년 수립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는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로 정하였고,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영역의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함.
- 1인가구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일상 돌봄을 지원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인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는 1인가구의 고독 및 고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소셜다이닝 지원, 1인가구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중장년·노년 가구 일상생활 유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함.
 - ‘여성 1인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은 여성 1인가구 등 대상범죄에 대한 예방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접근 및 거주 전자 감독 대상자(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 발찌를 착용한 자) 밀착 관리, 여성범죄 관련 부처 간 통계 개선을 추진하고, 위기상황이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 및 여성 안심 앱과 112·119 상황실 즉시 연계가 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확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강화하여 취약지역 발굴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함.
-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족형태·인식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 증가 등 정책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가족 다양성 수용 법·제도 개선 및 문화 확산,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기반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정하였고, 4차 계획의 4개 영역 및 정책과제별 세부사업을 시행함.

- 1인가구 지원은 인식개선을 통한 가족 다양성 수용, 안전관리 및 돌봄체계 강화, 가족센터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함. 2022년 12개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던 사업을 2023년에는 36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함. 일상생활 돌봄, 심리·정서적 지원, 원가족과의 관계 맷음 가족상담 지원, 소통·교류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 취약 및 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2023년에는 1인가구,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함.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가족돌봄 지원, 심리·정서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전환 운영함. 2022년에는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체계, 국민비서 등과의 연계를 추진함.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선함.
 - 여성 등 1인가구 대상 범죄 예방체계를 확충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함. 2022년에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스토킹 담당 경찰관 배치,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강력팀 신설, APO 경력경쟁채용 실시를 추진하였고,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에서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요인 정밀 진단·분석을 추진하였음. 2023년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예방·홍보 추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예방치안 추진 등을 실시함. 또한 전자 감독 대상자의 여성안심구역 진입·체류 여부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관리, 지자체 CCTV 연계·활용을 통한 신속한 현장상황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함.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 안전 및 안부확인, 가사 및 이동지원, 보건·영양·위생교육,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요양 등 고비용 돌봄으로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3년에는 활동형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예방적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함.

마.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 다양한 가족형태 및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군·구 중심의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함.
-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확대 및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위기가족 조기 발굴·지원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접근성·인지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자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 1인가구 지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인가구 긴급돌봄·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으로 1인가구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1인가구 고립·고독 예방을 위하여 생애주기, 성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함. 행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 사회보장체계와 연계한 가족서비스 제공, 국민비서-가족지원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한 가족센터 서비스 제공, 지역 유관기관과의 발굴·연계 체계 구축을 추진함.
 - 가족센터 접근성·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가족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생활밀접 시설과 연계한 가족센터 건립,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를 추진함.

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해당 법률 제6조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고독사 발생 감소,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핵심과제, 3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였음.

- 추진전략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인적 안전망 활용, 앱(App)을 활용한 신고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 및 판단도구 개발 등임.
- 추진전략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 간 연결을 위한 공간 활용 및 조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AI 및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등임.
- 추진전략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은 청년, 중·장년, 노인, 사망자·유가족 사후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청년 위험군 지원을 위해 고립·온둔 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정신건강관리 지원,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함.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건강관리 및 생활 지원, 사회참여 유도, 재취업 지원, 평생교육 강화 등을 지원함. 노인 위험군 지원 방안은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지지체계 구축, 사전 장례 준비 지원 등임.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으로는 공영장례 확대, 심리 지원,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함.
- 추진전략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까지 연계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 및 지원 강화, 관련 법률 개정,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예방 캠페인 실시,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함.

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 2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은 2004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 현재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문제이고,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그 빈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또한 남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대두되며 생명안전망의 조성이 필요함.

-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비전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는 자살사망자 수 감소,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고위험군 집중관리이며, 이에 따른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정하였음.
- 1인가구 관련 정책은 핵심과제 중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강화를 추진함.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
 - 20~30대 여성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추진함.
 -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강화가 필요함.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를 통해 고립,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함.
 - 독거노인, 치매환자 가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를 추진함.

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3년 중앙정부 시행계획

- 초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과 2023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해당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1인가구와 관련한 과제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취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서비스, 입원·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돌봄서비스, 생애말기 돌봄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 등을 담고 있음. 청년 대상 정책과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있음. 또한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수급체계 조정을 추진함.

□ 2023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1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노인 우울증 스크리닝 등)’은 독거,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치료·심리지원, 정신건강캠페인을 추진함. 2023년에는 지자체별 노인 대상 특화 마음건강 사업 추진,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를 계획함.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는 독거노인 등 치매·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집중 치료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고위험군 관리, 치매전문교육, 치매예방을 추진함. 2023년에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진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관리서비스 제공,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치매예방프로그램 시행, 의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는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기능 유지를 지원하여 입원,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안전확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2023년에는 55만명을 대상으로 활동형 서비스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은 가족부재, 독거, 치매노인 등 보호 및 수시 돌봄이 필요한 재가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함. 2023년에는 통합재가 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예비사업 실시 및 평가를 추진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추진함.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고령자복지주택 공급)’는 독거노인 등을 포함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총 5천호의 고령자복지주택(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함.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및 치매노인 존엄성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2023년에는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치매공공후견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추진함.
-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 구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2021년 본격 시행하여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청년가구 대상 공급 확대 및 임차지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곳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저리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에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0.6만호 공급, 매입임대주택 2.6만호, 전세임대주택 0.95만호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한 청년주택 1.4만호 공급, 청년 8만 가구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대출 저리 융자지원 등을 추진함.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돋기 위함. 2022년 청년월세 신청 및 지급을 처음 시작하였고, 2023년에 온라인 홍보 강화, 청년월세 지급,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2. 관련 부처 추진 정책 및 사업

- 1인가구 관련 정책과 가장 밀접한 부처는 여성가족부임.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및 긴급 돌봄 등 1인가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담고 있음.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기는 사회관계망 및 독립생활 준비, 중장년기는 노후생활 준비, 노년기는 심리상담·재산상담·건강생활 등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도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에는 새로운 복지대상 및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소득·자립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고립·온둔청년 대상 실태조사 및 고위험군 발굴·지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및 예방·관리 사업 기반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실시함.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 추진,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방안 마련 등을 실시함.
-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함. 기본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인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독거노인, 정신위기자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안내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으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2023년에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2-1] 1인가구 지원 복지서비스 목록

구분	사업명	담당기관
생활지원	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LH마이홈(주거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 급여 바우처 상담센터(교육급여)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저축계좌(I, II)	보건복지상담센터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 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 임대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 임대콜센터, 지방도시공사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주거대출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 SH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구분	사업명	담당기관
건강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콜센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리지원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사회참여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돌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디지털배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 2 절 서울시 1인가구 정책 동향

1.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해당 조례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였고, 시행규칙을 통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적용대상에는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함.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계획수립에 활용 가능한 실태조사 실시, 1인가구 지원 사업,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임. 조례에서 명시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과 1인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8조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지원사업 (제1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 기능 (제12조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2018년에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조례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함.
-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또한 예방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 지원계획 포함 사항과 예방 및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발굴·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조례를 제정하였음. 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고, 사회적 고립청년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의미함.
-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고립청년 발굴,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 수집·관리, 지원사업 시행,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이 있음.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본계획 수립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제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서울시 1인가구 관련 계획

가. 민선8기 서울시정

- 서울시 민선8기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 감성도시라는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서울시정을 펼치고 있음.
- 주택, 균형발전, 경제,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돌봄, 복지, 건강, 교육, 여성, 청년, 민생, 안전, 행정혁신의 16개 세부분야에 걸쳐 총 24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음. 1인가구와 관련한 사업은 주택, 돌봄, 복지, 여성, 청년, 안전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비전

- ✓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선도 도시, 창의와 혁신의 미래 도시
- ✓ 회복력 강한 안심도시, 스마트한 건강도시
- ✓ 모두가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관광하고 싶은 감성 문화도시



미래상

'동행' 특별시



1. 상생도시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매력' 특별시



2. 글로벌선도도시

세계 5위
경쟁력 갖춘 도시로
발돋움합니다.

'동행' 특별시



3. 안심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매력' 특별시



4. 미래 감성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가
됩니다.

정책목표

1. 상생도시

-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 '서울권'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등

2. 글로벌선도도시

-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구축
- 아시아 금융중심
도시 서울
- 10대 혁신산업 거점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 안심도시

-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통한 그물망
스마트 안전 도시 등

4. 미래 감성도시

- 서울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조성
- 자율주행 미래교통
선도도시 구축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등

[그림 2-6] 민선8기 서울시정의 비전

자료 : 서울특별시(2023). 민선8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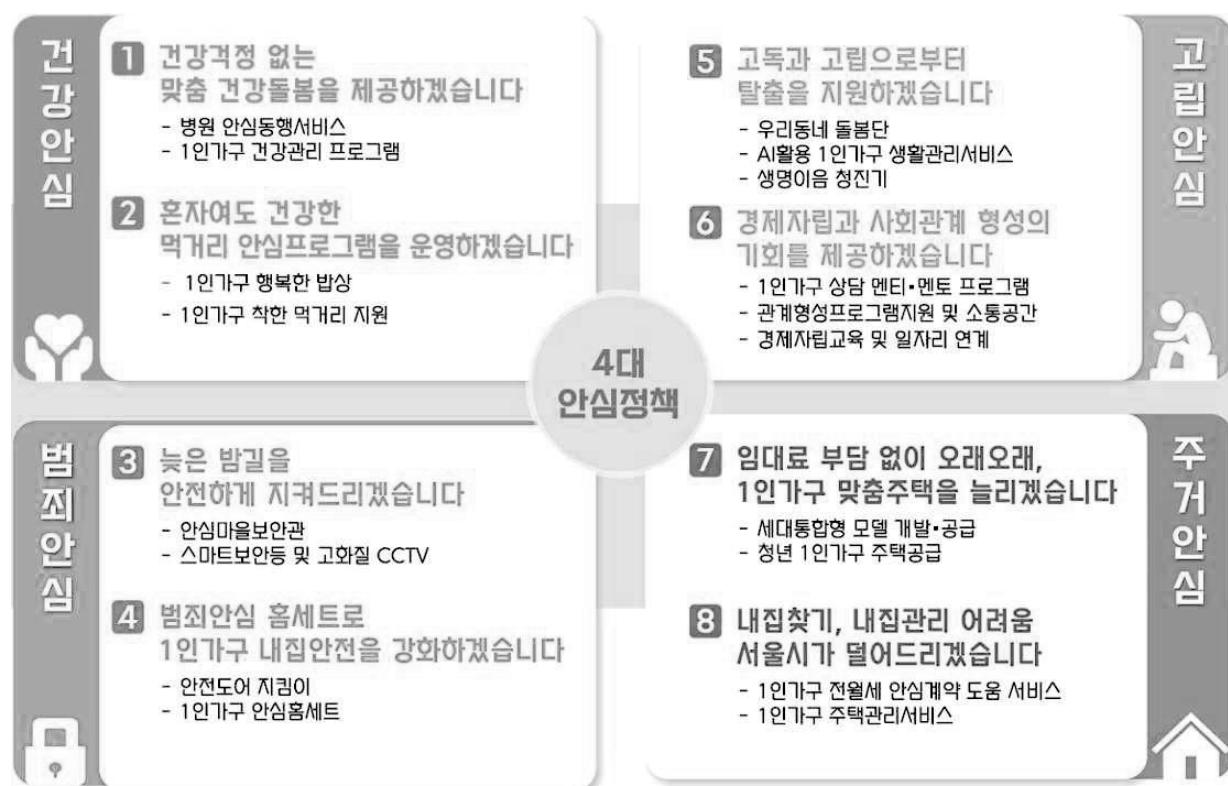
- 주택분야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의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등 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지원함.

- 돌봄분야의 ‘우리동네돌봄단 확대’는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안부확인 등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안부확인 중심에서 관계망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활동을 강화함.
- 복지분야의 ‘스마트기술 활용, 고령자 1인가구 취약계층 집중돌봄’은 첫 번째,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생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안전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두 번째, 자발적 은둔, 우울, 사회적 고립 독거 어르신 가구에 돌봄로봇을 보급하여 우울감 해소 등 특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함.
- 복지분야의 ‘1인가구 불편, 불안, 불만 3불 해소’는 1인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불안해소를 위해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구역 등 안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만완화를 위해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생활밀착 서비스로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확대 운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자치구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함.
 - 안전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안심마을보안관 전 자치구 배치, 스마트보안등 설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안심이앱 기능 강화 등을 실시함.
 - 사회적 고립 및 주거부담 해소와 관련,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세대 혼합형 주거모델 개발 등을 실시함.
- 복지분야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함. 2023년에는 자립정착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자립준비 단계부터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함.
- 여성분야의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애전환 재취업 지원 대상을 1인가구,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함.
- 청년분야의 ‘고립·은둔청년지원’은 사각지대의 청년을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으로 구분하여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고함.
- 청년분야의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하는 경우 월 20만원(최대 10개월) 임차료를 지원함. 2023년에는 연간 5만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함(기존 2만명).

- 안전분야의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통한 그물망 스마트 안전도시’는 1인가구 밀집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치구-서울시-112, 119 상황실 간 영상정보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확대로 시민안전에 신속 대응함.

나.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 쟁글벙글 서울

- 2022년 1월 발표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1인가구 안심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안심정책과 정책별 핵심과제 2개씩 총 8개 핵심과제를 5년간 추진함. 4대 안심정책 분야는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을 선정하였음.
- 건강안심의 핵심과제는 건강돌봄, 안심먹거리, 범죄안심의 핵심과제는 마을안전, 내집안전, 고립안심의 핵심과제는 고독·고립탈출, 사회관계자립, 주거안심의 핵심과제는 맞춤주택공급, 주거불편해소가 해당함.



[그림 2-7]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 8개 핵심과제

자료 :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 쟁글벙글 서울.

다.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계획

- 2023년에는 ‘3불(不) 해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불(不)은 불편(생활), 불안(안전), 불만(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함.
- 첫 번째, 불편 해결을 위하여 돌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확대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확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25개 자치구 전면 확대 등임. 특히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대상인 중장년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청년 1인가구 대상으로도 신규 운영함.
- 두 번째, 불안 해소를 위해 1인가구의 내집 안·밖 활동공간의 안전을 강화함. 관련 내용은 안심마을보안관 순찰효율 강화, 안심이앱 기능 강화 등 안전한 귀갓길 조성, 안심장비 지원사업 내실화 등임. 2023년부터는 안심이 앱의 경우 CCTV 등 안심시설물이 설치된 안전귀가경로 추천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고, 안심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초인종을 놀렸을 때 가정용 CCTV로 집 밖 상황을 볼 수 있는 스마트초인종과 자치구 관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
- 세 번째, 불만 완화를 위해 고독·고립 극복 및 정책 참여 지원을 확대함.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1인가구 소통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마주 봄(春) 매니저’ 신규 운영 등이 있음. 2023년 새롭게 실시하는 마주 봄(春) 매니저는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찾아가는 생활안심 코디네이터 30명을 선정하여 발굴 및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 주기적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를 추진함.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계획

불편
해결



불안
해소



불만
완화



병원 안심 동행

- ✓ 이용 대상 확대 : 1인가구 → 누구나 이용 가능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 ✓ 이용조건완화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선교先이용자 한정 → 미 이용자도 가능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

- ✓ 중장년 대상 확대 : 행복한 밥상 10개 자치구 → 15개 자치구

- ✓ 청년 대상 신규 운영 : 건강한 밥상 5개 자치구 신규

- ✓ 소통·건강 프로그램 강화 : 자율운영 → 강사지원 및 월1회 필수 운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 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 14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 ✓ 주거안심매니저 역량제고 : 직무기초 교육 → 역량강화 교육

안심마을 보안관

- ✓ 자율방범대, 지역거주자 활용한 보안관 구성으로 순찰효율 강화

안심귀가 스카우트

- ✓ 안정성 강화 : 안심이 앱 및 경광봉 활용 → 호신용 스프레이 추가 구비

- ✓ 거점위치 및 개수 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안심귀가 택시

- ✓ 서울시 등록 8만여 대 택시 대상 본격 운영

안심이 앱

- ✓ CCTV 등 안심시설물 설치된 안전귀가경로 추천 기능 추가 신규

안심장비 지원사업

- ✓ 필수품목(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음성인식 비상벨) 지정, 안전 강화

- ✓ 스마트초인종과 총괄관제시스템간 연계로 신속지원체계 구축 추진 신규

자치구1인가구 지원센터

- ✓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멘토단 체계화 : 전문멘토단, 생활멘토단, 특화멘토단으로 멘토단 개편

- ✓ 쌍글벙글 사랑방 추가 : 4개소 → 8개소 확대

쌍글벙글 경제교육

- ✓ 교육 주제 확대 : 재무, 부채 → 전화금융사기 예방 등 추가

- ✓ 교육 내실화 : 연령별 반구성 → 연령/수준별 반구성, 심화과정 추가

마주 봄(春) 매니저

- ✓ 찾아가는 생활안심 코디네이터 30명 신규 운영 신규

[그림 2-8]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계획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2.27.). 서울시, 1인가구 ‘3불(不) 해소’(불편·불안·불만)로 ‘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라.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23~’ 26)

-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증가,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양적 부족, 자살 예방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자살 위험군 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알코올 중독·마약 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 부각, 재난 상황에 대한 심리지원 시스템 미흡 등 사회적 문제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사업 강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시청 내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회의 등을 추진하여 ‘서울형 정신응급합동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등 관련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음.
-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2023~2026)의 비전은 ‘마음건강 동행도시, 서울’로 정하였고, 5개 분야에 5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음. 마음건강증진 분야 13개 사업, 마음치료강화 분야 13개 사업, 자살예방 분야 10개 사업, 중독관리 분야 11개 사업, 재난심리지원 분야 9개 사업이 해당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민관협력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굴한 고립·온둔 청년에게 원스톱 지원(발굴→진단→상담→맞춤형 프로그램→사회복귀)하는 고립·온둔 청년지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통한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청년 상담소를 통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를 추진함.
 - ‘위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은 예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와 필요 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 아동 등 위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쉼터 운영 확충 및 심리 서비스를 제공함.
 - ‘자살예방 및 수단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는 지역사회 내에 실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살예방사업 추진 인프라를 강화함. 협의체 중 하나로 청년자살예방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1인가구, 노동, 대학, 연구, 심리, 언론, 온둔·고립, 정책, 청년활동, 청년주거 등 19개 분야 관계자가 포함되며 청년 자살예방 접근 전략 방안 및 분야별 제언을 담당함.
 -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자살 위기 대응’은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 대상별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1인가구,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안정망 협력체계 강화를 실시함.

비전

마음건강 동행도시, 서울

목표

시민 누구나 쉽게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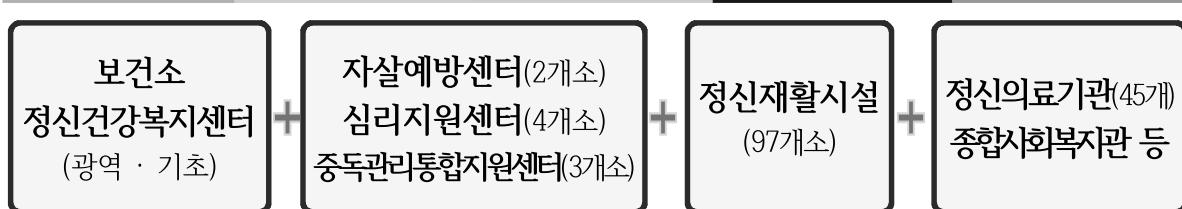
추진 전략

- ① 모든 시민(일반, 정신질환 당사자 ·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
- ② 상황별(자살, 재난, 중독 등) · 생애주기별 위기로부터 안전한 체계 구축
- ③ 시 중심, 공공 및 민간 협력 기관과 견고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핵심 과제

마음건강증진	마음치료강화	자살예방	중독관리	재난심리
디지털 마음건강 통합관리 '마인드 소울' 개발 신규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체계 강화 강화	자살 예방 정책 추진기반 강화 강화	알코올 중독관리 및 회복 지원 강화 강화	심리적 응급처치 신속 대응체계 가동 신규
'1년에 1번!' 마음 건강검진 정착 확대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신규	시민참여를 통한 자살 안전망 구축 강화	마약류 중독 집중관리 및 재활 추진 신규	민 · 관 협력 재난 심리 상시 인프라 구축 신규
지역사회 기반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강화	지역사회 고위험군 사례관리 서비스 내실화 강화	생애주기별 자살 돌봄 체계 구축 강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관리 강화 강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신규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강화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자살 의·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확대	중독관리센터 및 재활시설 인프라 구축 신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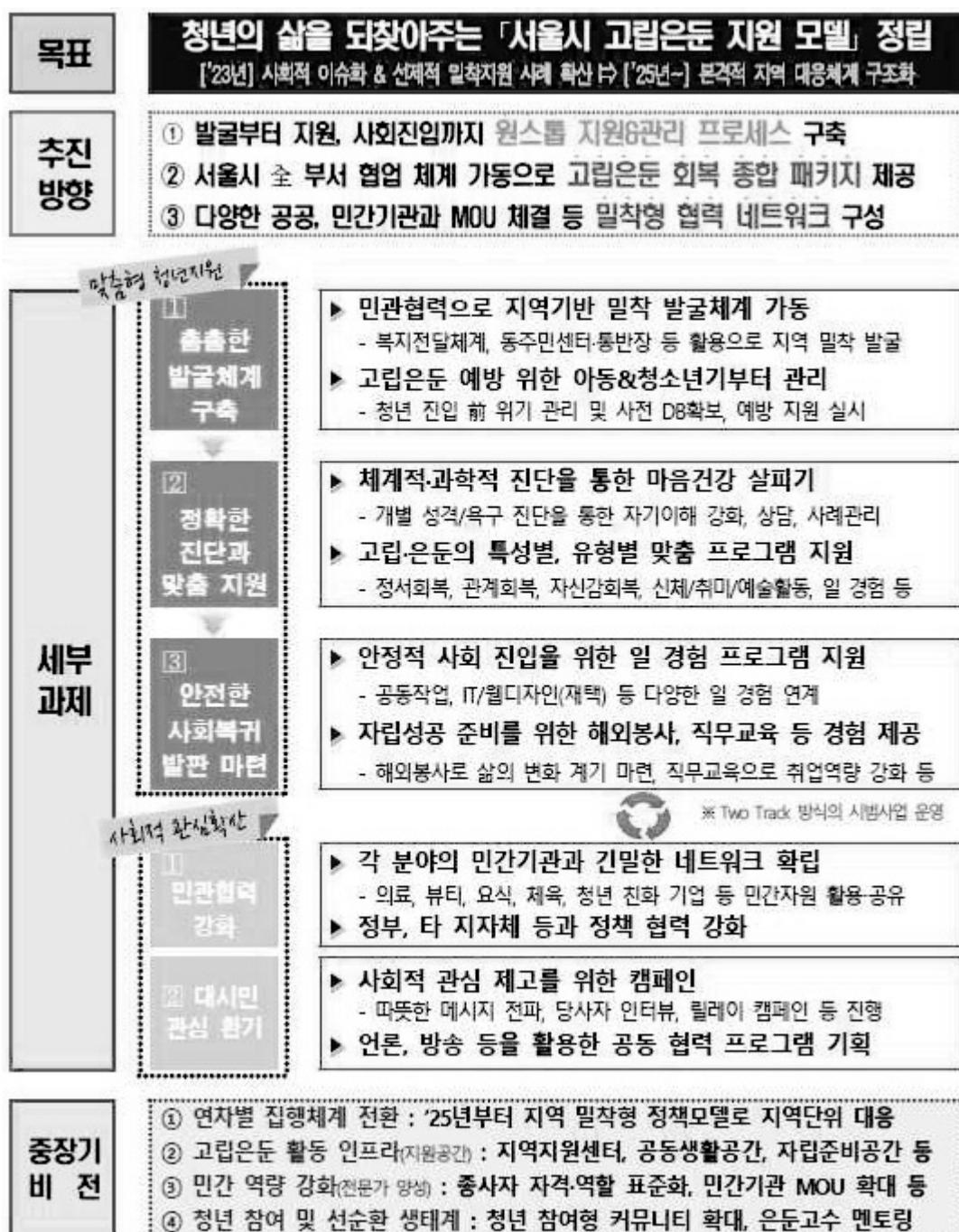
[그림 2-9]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23~'26) 추진 체계도

자료 : 서울특별시(2023). 서울시 정신건강 종합계획('23~'26년).

마.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

- 최근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한 구직 단념 청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 이후 우울·고립감 회복의 한계를 겪으며 청년의 고립·은둔이 가속화 되고 있음. 이러한 고립·은둔 이슈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산되었고, 공공 차원의 정책지원 모델 발굴이 시급해짐.
- 서울시에서는 2019년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 2020년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 2021년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2022년 고립청년 지원사업, 은둔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해왔음.
- 또한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 진출까지 지원과정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관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형 정책 지원모델을 수립하고자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청년의 삶을 되찾아주는 「서울시 고립은둔 지원 모델」 정립’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방향과 함께 맞춤형 청년지원 세부과제, 사회적 관심확산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음.
- 맞춤형 청년지원 과제는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 안전한 사회복지 발판 마련임.
 -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기반형 밀착 발굴체계 가동, 예방적 차원의 아동·청소년기 사전관리 및 연계, 가족과 지인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함.
 -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을 위해 체계적·과학적 진단을 통한 마음건강 살피기(1단계)와 은둔형, 비활동고립형, 활동고립형의 특성 및 유형별 프로그램 지원(2단계)을 추진함.
 - 안전한 사회복귀 발판 마련을 위해 관계 및 사회성 치유를 통한 일 경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일 경험, 청년 니즈를 반영한 일 경험,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을 제공하고, 해외봉사 경험을 제공함.
- 사회적 관심확산 과제는 민관협력 강화, 대시민 관심 환기임.
 - 대시민 관심 환기를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및 당사자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캠페인과 참여유도형 홍보를 추진함.
 -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청년재단, 아동권리보장원,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등 공공분야 간 협력을 통한 정책 숙성과 의료, 뷰티, 종교, 식품 및 배달, 진로관련 기업, 청년친화 기업 등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함.

- 서울시는 2024년까지 시 주도의 시범 밀착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지역 밀착형 정책모델을 통해 지역단위 대응을 추진하고자 함.



[그림 2-10]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추진체계

자료 : 서울특별시(2023).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

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2단계 자립지원대책을 보완하여 당사자 및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마련함.
- 2023년 추진하는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과거 1·2단계 자립지원대책과 연속성을 가지는 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 체계의 4대 분야와 12개 중점사업으로 구성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 분야는 멘토링 활동 지원체계 형성,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전 분야는 대중교통비, 자립정착금 등을 통한 경제적 생활부담 경감, 자립체험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함. 맞춤진로 분야는 고민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 1:1 컨설팅,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함. 지지체계 분야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탈 고립·온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채용, 전용공간 운영 등을 지원함.

사.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 2022년 서울시는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발표하였음.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금융, 참여·공간의 5개 영역 50개 과제를 구성하였음.
- 이 중 핵심과제로 청년도약(JUMP), 청년구출(SAVE), 청년기회(CHANCE)의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함.
- 전체 50개 과제 중 8개 사업은 현행 유지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11개,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월세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22만3천명의 청년 1인가구에게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고, 마음건강 사업을 통해 고립·온둔 청년의 고립 정도를 사회적 고립척도로 확인하여 체계적·맞춤형 지원을 실시함. 그리고 잣은 이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1인가구에게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함.

아. 서울런 4050 추진계획

-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해 50~64세의 장년층 대상으로 지원해왔던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40~64세의 중장년에게 지원하고자 함. 서울시 중장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 개인에 따라 복잡하고 상이한 욕구를 가진 세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세대임. 이에 따라 세대별(40대, 50~60대)로 맞춤형 일자리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및 생애설계·노후준비에 대한 종합정책이 필요함.

- 추진계획을 통해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디지털역량 강화, 생애설계 노후준비, 인프라 조성의 5개 목표와 48개 추진과제를 구성하여 40대에게는 전직·이직을 위한 직업 훈련·역량 강화를, 50~60대에게는 경력 맞춤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추진과제로는 일자리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 강화 방안으로, 1인가구 또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탄소중립·다문화 분야 등과 관련한 중장년 보람일자리 양적·질적 확대 운영, 보호종료청소년 정서 회복 및 고령자 디지털 전환 적응 등 중장년 지역사회돌봄단 확대 운영, 정서적 고립감 등으로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함.

3. 서울시 1인가구 지원 행정조직

가. 1인가구담당관

-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1인가구담당관에서 서울시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함. 1인가구담당관은 1인가구정책팀, 1인가구협력팀, 생활지원팀, 안전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업무는 정책 자문위원회 및 서포터즈 운영,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사회관계망 형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병원안심동행 등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안심마을보안관 등 범죄 안심환경 구축,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주거불안 해소 등임.
-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세대 및 성향,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는 1인가구에게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확대 운영,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자치구 전면 확대, 중장년·청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함.

[표 2-2] 서울시 여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팀별 업무분장

구분	내용(2023.7.20. 시행)
1인가구 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안심 시행계획 수립 ○ 1인가구 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1인가구 정책자문단 등 회의체 구성 및 운영 ○ 1인가구 포털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콘텐츠(생활꿀팁, 자료실) 관리 ○ 1인가구 지원사업 SNS 운영 및 콘텐츠 관리, 콘텐츠 제작 및 게시 등 ○ 1인가구 지원사업 시민제작 콘텐츠 공모 추진 ○ 1인가구 쌍글벙글 서울 서포터즈 운영 ○ 자치구 지원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등 자료관리 ○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 공감 토크 콘서트 추진 ○ 1인가구담당관 주요 사업 홍보
1인가구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인력증원 및 공간 확충 등 기능보강 ○ 1인가구지원센터 BI(기관 브랜드) 보급 추진, 운영 매뉴얼 개발·제도 개선 ○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적관리 ○ 1인가구지원센터 강사풀 구성·운영,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등 개최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 '쌍글벙글사랑방' 추진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국비)사업 추진 ○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경제자립 교육(재무·부채 관리) 추진 ○ '1인가구 상담헬퍼'(보람일자리) 사업 지원 ○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 ○ 중장년 대상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 '마주봄 매니저'(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생활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기본계획, 수행기관 선정, BSC, 매뉴얼, 성과평가 등)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금 교부 및 실적·민원 관리, 수행기관 지도·감독 ○ 건강안심 관련 신규사업 발굴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추진(기본계획, 수행기관 선정, 매뉴얼 등)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보조금 교부 및 실적·민원 관리, 수행기관 지도·감독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계획 수립, 홍보 및 모니터링, 실적 및 만족도 관리 ○ 병원 안심동행·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대시민 홍보 ○ 1인가구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 프로그램 추진
안전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보안관 계획수립 및 운영, 운영용역 업무추진, 초소 확보 및 교육 등 ○ 안심귀가스카우트 계획수립 및 운영, 예산 배정 및 정산 등 ○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시스템 운영 및 신규사업 개발, 유지관리 업무 ○ 안심사업 이용자 만족도 및 설문조사, 홍보 추진 ○ 안심이 총괄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불법촬영 예방·근절 및 대외협력 업무 추진 ○ 불법촬영 점검 및 기기 관리 지원, 시민감시단 운영 ○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및 운영 ○ 안심지킴이집 운영 ○ 안심장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예산 배정 및 정산 등

자료 : 서울특별시(2023). 각 팀 업무분장(2023.7.20. 시행) 재구성.

나. 1인가구담당관 외 지원 부서

- 1인가구담당관에서 1인가구 정책을 수행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업무 특성에 따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담당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함. 2023년에는 2,479명(자립준비청년 1,558명, 예비자립준비청년 921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지원,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함.
- 심리·정서 측면에서 예비 보호종료아동의 종합심리 검사 및 멘토, 또래 동아리 등 인적 연결망을 마련함. 생활안정 측면에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일자리 측면에서 특별 기술교육 패키지 운영 및 대학진학자의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을 지원함.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상담 등 지원사업의 질을 제고함.

2) 미래청년기획단

- 미래청년기획단은 일자리, 주거, 금융, 취약청년 등 서울시 청년 대상 정책을 망라하기 때문에 고립·온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담당하고 있음.
- 2023년에는 고립·온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종합 대응 관리시스템 가동,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MOU 추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시스템 운영, 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마음건강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실시함.
- 기존에 추진하던 서울영테크사업(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제공)은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유입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그룹 교육·커뮤니티 지원을 실시함.

3) 복지정책실

- 복지정책실은 2023년 전략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심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지,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동행복지의 3가지로 정하였음.
- 이에 따른 추진사업 중에는 2015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로 개편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선별방문, 집중관리하는 사업이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고시원·다세대 등 거주지 여건 및

연령 등을 고려한 구·동별 자치지표를 추가 설정하여 촘촘한 발굴·방문을 추진하고,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거부가구 및 복합적 위기가구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함.

- 또한 고독사 위험가구의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연중 운영, 실무매뉴얼 기반 활동 및 교육 강화, 돌봄단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함.

4) 주택정책실

- 주택정책실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주거약자와의 동행,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매력 건축도시 서울, 미래 서울의 4가지를 전략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주거약자와 관련한 사업 중에는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쪽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반지하와 같이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임대주택 우선 입주지원,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입주 이후 정착지원 등을 추진함.
- 또한 사회주택 공급, 청년 매입임대 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등 주택공급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등 현금지원 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등 주택관리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추진함.

5) 경제정책실

-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는 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함.
-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 방안 중 하나로 사회취약계층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및 중장년 전직특화 과정 운영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함.
- 고용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추진함. 해당 사업은 5개 유형(경제·신체·사회안전·기후환경·디지털 약자) 대상으로 분류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돋는 자조·자립 기반 사업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경제약자는 안심도시락 배달도우미, 긴급복지 대상 가정발굴 등을 실시함.

4.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관

가. 오프라인

1) 서울시가족센터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22년 서울시가족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음.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로 기능하며 가족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가족센터를 지원함.
-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가족서비스 개발 및 보급, 가족유형 편견해소 포용·평등 확산, 다양한 가족 사회안전망 강화, 자치구센터 지원 강화,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음.

2)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하여 50+세대를 지원하고자 2016년 설립되었고, 2023년부터 40~64세로 정책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세대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캠퍼스-센터로 기관을 구성하였음. 2023년 현재 재단본부 1개소와 캠퍼스 4개소(서부, 중부, 남부, 북부), 센터 12개소(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 강동, 양천, 성동, 강북)가 있음.
- 일자리, 사회공헌, 직업교육, 생애설계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일자리 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 이·전직 지원,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디지털이음단, 지역사회돌봄단을 실시함. 직업교육 사업으로는 직업역량강화 교육과 40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생애설계 사업으로 생애설계상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함. 재단의 사업들은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음.

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세대를 위한 기관으로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음. 2016년 개관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및 인지도 확산을 통한 광역센터 역할 정립’이라는 비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